

구곡담 폐지·무원칙 야권연대 반발 확산

선거구 협상 또 결렬

“농어촌 말살책 철회”

주민들 국회서 규탄

야권연대는 지분 나누기

“구태 정치 말라”

예비후보들 비판 고조



담양·곡성·구례 지역구 사수 운동본부 회원들이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분할 절대 반대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4·11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농어촌 선거구 폐지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양보하는 방식의 야권연대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 같은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 선거구 폐지 반발=여야의 선거구 확정안에 반대하는 담양·곡성·구례와 경남 남해·하동과 부산 기장 주민 1200여명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농어촌 말살책 철회”, “지역구 사수”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구 통폐합이 강행될 경우 책임자 낙선·낙천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또 농어촌 지역 통폐합 선거구 확정에 반대하는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등 전국 농어민 단체 대표들도 이날 오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하려

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재두 예비후보와 곡성군의회의도 반발에 합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면 원칙과 기준에 충실해야 함에도, 영·호남 각 1석과 비례대표 1석을 축소하려는 새누리당의 법체계와 법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곡성군의회의도 이날 오후 의원 공동 성명을 통해 “선거구 확정은 농촌을 말살하고 도시 지역을 살리려는 나뉘먹기식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를 폐지 논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총선과 대선에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저항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중앙당을 방문,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선거구 확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영·호남 지역구를 각각 1석씩 줄이고, 서울에서도 1석을

줄이자”고 수정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는 제안”이라며 일축했다.

◇무원칙한 야권연대 비판=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연대는 국민의 명령이고 승리의 열쇠로, 야권이 연대해 하나가 돼야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상식과 명령을 받들지 못하면 국민의 뜻마저 흩어질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천심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협상이 타결되면 그 결과를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관규(순천)·김희철(서울 관악)·장영기(경기 광명)에 비후보 등 9명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통합진보당은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기도 전에 당대표는 사람이 8대 2 지분요구를 하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독립직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19일까지 협상을 끝내라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런 통합진보당의 모습은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이루어 정권을 심판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더 찾기 위해 일방적으로 생떼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국민은 야권이 총선과 대선 승리에 눈이 멀어 정치적으로 야합하는 구태 정치의 표본으로 인식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미 공직후보자의 공천권은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이 원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시작

“5당4락”... 지지세력 모으기 전쟁

민주당의 4·11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각 예비 후보 캠프에서는 지지자들을 선거인단에 참여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20일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예비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날 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기존에 확보한 지지자 명단을 토대로 선거인단 확보전에 나섰다. 각 캠프는 모든 조직을 총동원, 지지자들에게 선거인단에 등록해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전화와 문자 메시지는 물론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예비후보 홍보와 함께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했다.

여기에 지역구의 청년·주부·노인 등을 중심으로 한 각종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인단 참여 방법을 설명하면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광주 모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인단 모집 결과에 따라 경선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일단 그동안 모아왔던 지지자 명단을 토대

5000명 이상 돼야 승리

예비후보들 조직 풀가동

SNS 등 통해 참여 독려

로 선거인단 참여를 적극 독려했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 경선 선거인단 확보 전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5당 4락’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자신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50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경선 승리가 가능하고 그 이하면 경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는 것은 지난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확보한 선거인단이 각기 3000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다 국민경선 선거인단 접수가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각 예비 후보 캠프에서는 전화 접수를 위한 콜센터

가 불통된데다 노년층 지지자들이 인터넷 접속에 어려움을 겪자 발을 동동 구르며 속을 태웠다.

여기에 지연·학연·혈연 등을 통해 확보한 유권자들을 선거인단에 참여시킨다고 해도 지지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광주 모 예비 후보 캠프에서는 그동안 확보한 지지자 명단을 토대로 자체 점검에 나선 결과, 20~30% 이상이 타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면서 일부에서는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의 선거인단을 모아줄 수 있다며 예비 후보 캠프에 사례를 요구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동원 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 모 예비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역구에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일부 인사들이 선거인단 모집을 매개로 사례를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결국 돈 선거, 조직 선거를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개 조사기관 유선전화 RDD 방식 확정

〈임의결기〉

민주, 여론조사 어떻게

민주당은 4·11 총선 공천과 관련,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2개의 여론조사기관이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RDD(임의결기)방식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과 20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각각 열어 이 같은 내용의 19대 총선 공천을 위한 국민여론조사 시행세칙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적합도 및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후보자 간 합의 시에는 100% 여론조사경선을 가능하도록 하고 선거인단 모집결과 선거구 유권자 총수의 2%에 미달할 경우에도 모바일·현장 투표 70%와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세칙은 또 기관별로 700 샘플의 유효응답을 요구했으며

후보자 소개는 25자 이내 대표경력 2개를 사용하도록 했다. 후보자는 순환 호명하고 당내 후보자 적합도를 문도록 했다.

민주당은 나이가 표본 추출은 성별·연령별·지역별로 할당해 하위 연령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40세 이상 59세 이하 ▲60세 이상 등 3단계로 나누고 지역은 단일 선거구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광역의원선거구별로, 복합선거구의 경우 시·군·구 별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기간은 원칙적

으로 하루로 하되 할당 샘플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다음날 추가 조사하고 그래도 요건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해서 환산하도록 했다. 결과는 합산해 평균값을 계산하도록 했으며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않기로 세칙을 정했다.

한편, 모바일투표 신청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재주소와 등록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현장투표로 바꿀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변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비리 혐의자 공천 엄격하게 적용해야”

천노 등 인적쇄신 요구

민주당의 4·11 총선 공천심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천노·시민사회 세력이 당 지도부의 인적쇄신 등 공

천개혁 의지가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해찬 전 총리, 김두관 경남지사가 포함된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단은 20일 이번 총선 공천심사와 관련, “불법·비리 혐의 후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진 않았으나 1·2심 과정에서 이미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후보자라면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성명의 요지다.

대표단은 “후보 중에는 비리 전력이나 혐의가 있는 후보들이 적잖이 있다”면서 “그러나 공심위의 구제장치가 자칫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엄격한 공천기준을 적용하는데 장애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물갈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총선에 임하려 하는 반면, 한명숙 대표는 반MB 반사이익에 쫓겨 인적쇄신에 미적거리는 것처럼 보인다”며 “음침마속이 필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종두

6년만 더하면 만점인데

아쉽습니다

MB 4년 10점 만점에 4.3점

...

국립목포대학교
해양풍력중심 신재생에너지 인재양성센터
http://owec.mokpo.ac.kr

신재생에너지 산업(해상풍력·태양광)을 선도할 거점대학 국립목포대학교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미래의 녹색산업화를 위해 국립목포대학교가 자연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전진기지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구현합니다. '녹색성장을 선도할 신재생에너지산업 허브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상풍력/태양광 에너지 관련 분야의 맞춤형 글로벌 인재를 책임지고 육성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도민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2012년 3월 14일(수) 14:00/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잘 가르치는 대학" ACE
국립목포대학교